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V)*
-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지원방안 -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V)*
-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People from North Korea after Free Transmigration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교수 이기영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영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연구소 과장 민현선
서원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김대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박미영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 : Rhee, Kee Choon
Prof. : Lee, Ki-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
Prof. : Rhee, Eun-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Yi, Soon-Hyung

Dept. of Architecture, Seowon Univ.
Assoc. Prof. : Kim, Dae-Nyun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Prof. : Park, Young-Sook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Assist. Prof. : Choi, Younshil

Institute of Global Marketing, Samsung Electronics Co., Ltd.
Senior Manager : Min, Hyun-Su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Doctoral Student : Park, Miyoung

* 본 연구는 1998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 공모과제임.

● 목 차 ●

- | | |
|--|--|
| I. 서론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체제
IV.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의식실태 | V.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provide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North Korean residents who might migrate into South Korea when free transmigration is allowed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is study was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present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defectors from North Korea were reviewed. Second,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migrated North Koreans in the future was identified based on empirical survey research. Third, the social adjustment programs for migrated North Koreans were discussed from results of the depth interviews which were carried out with 10 North Korean defectors.

To support migrated North Korean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d the first stage-village, which would have characteristic of group home. Education programs to support social adjustment of migrated North Korean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ir social adjustment stages. In the middle stage of adjustment model, education programs on living culture in South Korea could be adopte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the various aspects of living culture including consumption, clothing, food, housing, family, child rearing, adolescent education were specified and discussed in detail.

I. 서론

남북한 사회통합은 남북한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로 자리잡아 왔다. 하지만 그 동안의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통일의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해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 논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즉 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는 담론이 늘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자는 주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활기를 띠는 배경에는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자들의 수 증가와 남한 주민들의 금강산 여행,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증가 추세 등이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통일부의 보고¹⁾에 따르면

1999년 7월 현재 탈북한 입국자수 총1002명 중 사망·이민 209명을 제외하면 793명이 국내거주하고 있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추세이다. 또한 금강산관광 등을 통해 북한 땅을 밟는 남한주민들의 숫자가 늘고, 나진 선봉지구 등을 통한 경제교류와 최근의 민간차원의 문화·종교적 교류 등의 활성화도 이러한 분위기 형성에 큰 몫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 또는 통일에 대한 담론의 증가 저변에는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으나,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받아들이는 의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따라서 남북한 통일 이후 남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방안(1999. 7.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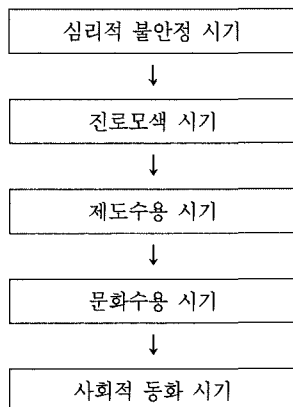
한과 북한 주민이 사회적으로 동화되거나 통합을 이루는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사회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갈등을 주로 생활문화 영역에서 다루어 남북한 주민이 성공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대략 사회적응단계모형과 문화적 적응유형 등 두 가지의 모형이 제시된다.

먼저 사회적응모형을 살펴보면,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은 크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직업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적응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심리적 적응, 제도적 적응, 문화적 적응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장호, 1996; 한만길, 1996 참조).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1>과 같이 다섯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생활적응은 이러한 사회적응 과정의 모든 단계와 관련이 되지만, 특히 제도수용 시기부터 문화수용 시기까지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특히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문화 영역은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 주민의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 문화적응유형 모형은 생활문화 적응의 차원



<그림 1>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이주민의 사회적응단계

		사고방식 적응	
		성 공	실 패
생 활 양 식 적응	성 공	I. 완전적응	II. 부분적응
	실 패	III. 부분적응	IV. 부적응

<그림 2>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생활문화 적응의 유형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생활문화 영역이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이기춘 외, 1997), 생활문화의 적응과 부적응은 이 두 차원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가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완전한 적응을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통합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술교육 등과 함께 사고방식도 서로 접근할 수 있는 의식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미리 밝히고자 하는 점은 문화적 상대론의 입장을 빌게 되면, 남북한 주민이 서로 동화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변화와 노력을 모두 논의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의 한계로 인하여 주로 북한이주민의 생활정착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남한 주민의 의식화 변화교육도 분명히 논의하여야 하지만, 이는 다른 연구를 기약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주한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고,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체계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경험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관한 의식실태를 살펴본 다음 면접조사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에서 이주

한 주민들의 생활적응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남한의 주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통합 이후 북한 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에 대해 어떤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두 번째로는 탈북인들과의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들의 생활적응 실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아보고 사회통합 이후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1.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후 북한 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의식(설문조사)

20세 이상 서울 거주(수도권 신도시 포함) 성인을 대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일반적 의식, 자유왕래 활성화 가능시 북한이주민을 위한 특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수준, 본인의 수용의사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는 1999년 9월 15일에서 10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502부의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 중 부실기재분과 최초 표집설계에 비추어 과표집된 20대 여성 표본 중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 39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

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이기춘 외, 2000)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탈북인의 남한생활 적응실태와 문제(면접조사)

본 연구에서 면접한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체계

다음에서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체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통합 이후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들의 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본 조건과 토대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백영옥(1998)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적응과 밀접한 실업수당, 금융지원과 사회보장, 취업지원, 주택지원, 사회적응 지원, 교육지원 등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업수당, 이주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사회보장 혜택

북한 이탈 주민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해지

<표 1> 심층면접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면접대상	성별	연령	교육수준	북한직업	현 직업	결혼여부	귀순일
L씨	여자	만50세	전문학교졸	유치원 원장	음식점 운영	북/현 기혼	1994
G씨	남자	만35세	전문학교졸	중앙당소속 러시아외화별이	사업준비	북 기혼/현 기혼(재혼)	1995
K씨	남자	만39세	대졸	토목설계, 러시아벌목공	북한관련 연구소	북 기혼/현 기혼(재혼)	1995
T씨	남자	만27세	대졸	무직 (졸업 직후 탈북)	대학생	북/현 미혼	1995
P씨	남자	만44세	고졸	식료품 판매	무직	북 사별/현 미혼	1996
J씨	여자	만40세	전문학교졸	화술방송원	무직	북에서 이혼	1996
R씨	여자	만36세	대졸	국가품질감독원	대학원 재학, 생활설계사 연수	북 기혼/현 독신(아들1)	1997
C씨	여자	만60세	고졸	주부	무직	북/현 기혼	1997
D씨	남자	만32세	대졸	공업대학 전임강사	무직	북 기혼/현 독신	1998
H씨	여자	만29세	전문대졸	미장공 (피부미용)	대학생	북/현 미혼	1999

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 실업상태에 있게 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적응교육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차는 남한도착 후 근로기간 차를 낚아 노후소득보장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획득한 연금 가입기간을 남한의 가입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국민연금제도에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령 또는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 특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의 사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북한 이탈 주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특별지원을 실시해야 한다.(이정우·김형수, 1995).

2. 취업지원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은 북한 이주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주도적인 직업체계에 익숙해져 있고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생소한 북한 이탈 주민에게 직업을 구하는 일과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정부에 대한 요망사항 중에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알선이 최우선이라는 데에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은 신변상의 문제나 남한 사회의 정보부족 등으로 자발적인 취업이 어려웠다.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채용한 기업 쌍방이 다 만족스럽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7%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북한 이탈 주민 채용기업의 60%가 북한 이탈 주민의 업무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선한승, 1995). 남한 사회 체류기간은 실업과 상관이 있으므로 직업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취업지원 훈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훈련 참여자의 적성, 과거

경력, 학력, 희망직종에 대한 사전정보를 분석해 남한 사회에 맞는 내실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남북한 통합 후의 필요한 산업인력계획을 고려해 작성하며 장기적으로 통일 후 북한 이주민이 시장경제사회로 편입하는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기능 및 기술자격 인정심사제도 도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직업교육과 훈련은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사설학원 등 다양한 직업훈련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비와 연수비는 국고부담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훈련교육이나 인턴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기업에게는 세제상의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후 직장배치 시에는 구인·구직정보망을 구축해 북한 이탈 주민에게 고용기회, 취업가능 분야와 직장 및 예상소득과 직업전망 등을 알려주고 기업에도 이들의 고용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전담기구를 설치해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장을 알선해야 할 것이다.

3. 주택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현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조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어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집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급증할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의 규모에 따른 주택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싼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을 분산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착지로 분산 배치할 때,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지역별 분산 정착에 관한 규정과 이를 반영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 영

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추진하고, 그 지방에 거주하려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우선적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착은 인구도 많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관심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주택지원의 부담도 덜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는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적응 지원

북한 이탈 주민들은 사회생활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적응해 가는 양상을 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아 남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오혜정, 1995). 따라서 북한 이탈 주민의 원만한 남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심리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 적응 교육이다.

건강한 자아정체성은 곧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안정된 생활적응과 관련되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심리적 정체성을 잘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은 유치원 시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제공되며 성인기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독 후 겪은 사회문제 중에서 대부분이 정체성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발생했다는 점(김혜은·서봉연·이순형, 1999)에 비추어볼 때, 정체성 강화는 사회문제 예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통일 후 사회교육의 핵심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체성 강화프로그램은 통일 후 유치원부터 청소년의 정규 학교 교과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 사회성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외에 생활적응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관심

과 이해 수준에 합당한 교육이 되도록 각 영역별 교육 및 사회 적응 지침서를 편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할 남한 사회 적응 교육내용을 북한 이탈 주민의 연령·성별 등에 따라 차별화해 우리 사회에 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적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사회 적응교육이 끝난 후에는 교육생끼리 동기회 모임을 만들어 귀순자끼리의 유대관계나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 적응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 적응을 위한 평생 교육기관으로는 각 시도별 종합사회복지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YMCA, 종교기관 등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관심 있는 동우회, 지역사회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을 결성하도록 하여 인간적 유대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5. 교육지원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에는 그 동안의 교육방향과 내용과는 다른 체계적인 재사회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단계별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년별로 남북한 교과과정상 차이점을 분석해 남한의 교과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을 실시하고(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상급학교 진학시 시험의 경쟁에 다소의 특혜를 주어야 한다. 현재는 최초의 편·입학 때만 지원을 받을 뿐 그 후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사회통합 이후에는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언어적 이질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사전을 편찬해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자격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각종 학력, 국가사

험, 자격증의 인정을 위해 심사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북한에서의 자격부여요건과 자격 수준이 한국에서의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보수교육 실시 및 추가필수요건의 충족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의식실태

다음에서는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통합 방식에서는 남한 주민들의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러한 남한 주민들의 의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이주민들의 생활적응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지원에 대한 태도,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용의사,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지원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인 수용의사 간의 비교,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비교분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1) 남북통일의 시기 및 방법

남북통일의 시기 및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서로 왕래를 하며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 참조).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지만, 대체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의 긴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2.6%로 나타났다.

2) 통일의 장점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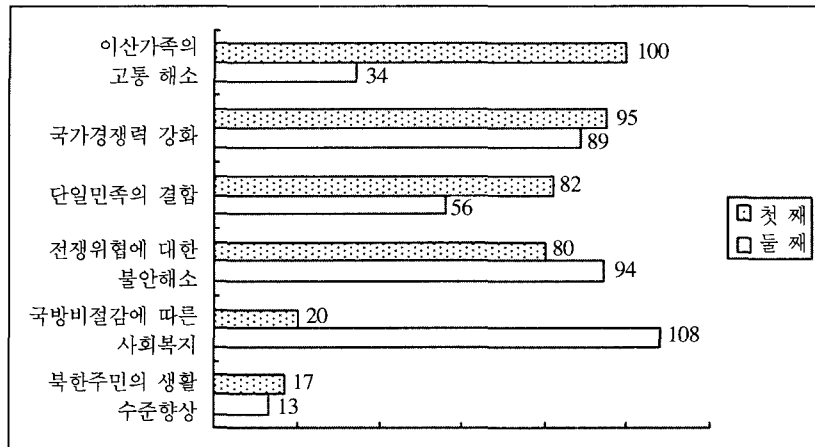
다음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국가경쟁력 강화, 단일민족의 재결합, 전쟁위협에 대한 불안해소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통일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한주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그림 3>, <그림 4> 참조).

2.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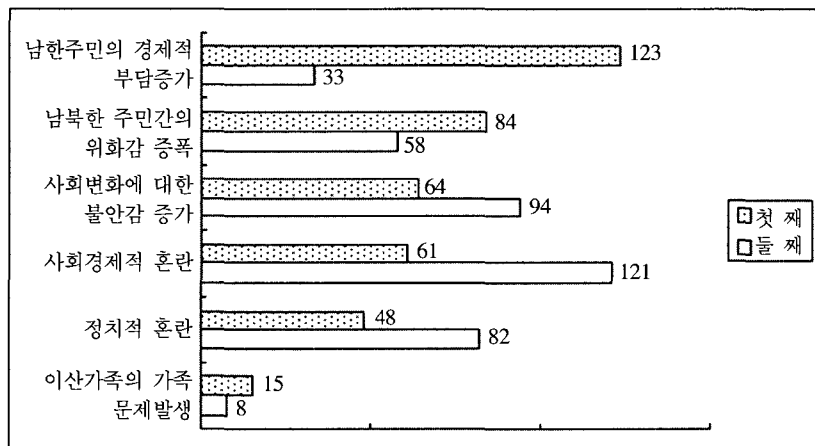
북한이주민을 위한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남한 가정에서의 홈스테이, 가족간 결연, 지역이나 사회단체 차원의 결연, 직장에서의 북한이주민 할당고용, 이주시의 주거혜택 등에는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하지만, 수양가족이나 의형제를 맺는 데에는 부정적인 편이었으며, 통일비용의 마련을 위해 소득의 일정부문을 각출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표 2>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문	항	빈 도(%)
①	가능한 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44(11.1)
②	우선 서로 왕래를 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284(71.9)
③	현재 상태를 유지하며 오랜 기간이 지난 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17(4.3)
④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다면 꼭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42(10.6)
⑤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낫다	8(2.0)
N = 397		



〈그림 3〉 통일이 가져다 주는 장점



〈그림 4〉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점

높게 나타났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기춘 외, 2000)에서도 나타났듯이, 북한이주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 면에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차원이나 사회단체 차원의 결연을 홈스테이나 가족간 결연 보다 지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개인이 소득 중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보다 북한

이주민에게 직장, 주거 면에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데 긍정적이다. 다시 말해, 탈북인에게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주민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다. 하지만, 개인적 교류보다 홈스테이나 가족간 결연을 통해서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지원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지역적 사회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표 3〉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태도의 빈도 및 평균

빈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분산)
1. 북한 주민이 가족없이 혼자서 이주한 경우 일정기간 남한 사람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5(3.8)	204(51.6)	155(39.2)	21(5.3)	2.54(0.43)
2. 남북한 가족간에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5(8.9)	243(61.5)	100(25.3)	17(4.3)	2.75(0.45)
3. 남북한간에 지역 차원이나 사회단체 차원에서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67(17.0)	277(70.5)	45(11.5)	4(1.0)	3.04(0.33)
4. 남북한 사람끼리 수양아들이나 수양딸, 의형제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5(1.3)	98(24.9)	242(61.4)	49(12.4)	2.15(0.40)
5.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 주민들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3.0)	135(34.3)	185(47.0)	62(15.7)	2.25(0.56)
6. 직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할당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8(9.6)	250(63.5)	94(23.9)	12(3.0)	2.79(0.42)
7. 북한 주민이 남한 학교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31(7.8)	176(44.4)	154(38.9)	35(8.8)	2.51(0.58)
8.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할 때 주택분양이나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37(9.3)	225(56.8)	108(27.3)	26(6.3)	2.68(0.53)

있다. 그러므로, 자유왕래가 활성화된 후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정부 주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주민간 교류도 광역환경의 차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수용의사

남한 주민의 북한이주민을 위한 생활적응지원 정책과 수용의사를 살펴보면, 북한이주민에게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되어 주겠다는 데에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그 밖에 북한 주민을 고용할 의사, 북한이주민과 같은 직장에서 팀으로 일한다거나, 동네에 북한이주민의 집단주거시설이 입주하는 것, 북한이주민이 옆집으로 이사오는 것, 나의 자녀와 북한이주민의 자녀가 친구가 되는 것, 내가 북한 주민과 같은 동우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는 모두 차이는 있지만 긍정적인 편이었다(〈표 4〉 참조). 하지만, 나의 가족이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북한이주민과 적극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홈스테이, 가족결연, 수양가족, 자녀와의 결혼에는 부정적이었다.

4.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수용의사간 비교

일반적 태도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쌍체 t검정(paired t-test)을 이용하였다(〈표 5〉 참조). 자유왕래가 활성화되었을 때 북한이주민을 배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자신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에는 다수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홈스테이 제도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값이 2.54로 중도적 수준이었으나,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평균은 2.16이어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결연의 경우도 제도 자체에 대한 지지와 우리 가족과의 결연의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단체 차원에서 남북한간에 결연을 맺도록 하는 것에 '그렇다' 수준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나,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도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양아들, 딸이나 의형제를 맺는 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남한주민의 소득을 일정부분 각출하여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태도와 본인이 물질적으

〈표 4〉 북한이주민 생활적응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본인 수용의사의 빈도 및 평균

빈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분산)
1. 나는 북한 주민이 이주해 정착하는데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3(0.8)	146(36.9)	222(56.1)	25(6.3)	2.32(0.36)
2. 나는 북한 주민에게 다정한 친구나 이웃이 되어주겠다	46(11.6)	302(76.1)	46(10.8)	6(1.5)	2.97(0.28)
3. 나는 북한 주민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18(4.5)	190(48.0)	171(43.2)	17(4.3)	2.52(0.42)
4. 나는 북한 주민이 일정기간 우리 집에서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겠다	8(2.0)	102(25.8)	231(58.3)	55(13.9)	2.16(0.45)
5. 나는 가족간 결연을 통해 북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	8(2.0)	157(39.7)	204(51.6)	26(6.6)	2.37(0.40)
6. 나는 북한 사람과 수양아들이나 수양딸, 의형제를 맺을 의사가 있다	5(1.3)	56(14.2)	249(63.0)	85(21.5)	1.95(0.41)
7. 나는 북한 지역의 직장에 근무할 의사가 있다	22(5.6)	159(40.4)	148(37.6)	65(16.5)	2.35(0.67)
8. 내가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경우 북한 주민을 고용할 의사가 있다	29(7.3)	271(68.6)	85(21.5)	10(2.5)	2.80(0.35)
9. 나는 직장에서 북한 주민과 같은 팀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	18(4.5)	224(56.6)	142(35.9)	12(3.0)	2.62(0.38)
10. 나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집단거주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좋다	15(3.8)	230(58.4)	128(32.5)	21(5.3)	2.60(0.42)
11. 나는 북한 주민이 옆집으로 이사오는 것이 좋다	16(4.1)	242(61.4)	117(29.7)	19(4.8)	2.64(0.40)
12. 나는 내 자녀가 북한 주민의 자녀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26(6.6)	274(69.4)	84(21.3)	11(2.8)	2.79(0.34)
13. 나는 북한 주민이 우리 동우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좋다	28(7.1)	275(69.4)	85(21.5)	8(2.0)	2.81(0.33)
14. 나는 내 자녀가 북한 주민과 결혼해도 좋다	16(4.0)	162(40.9)	165(41.7)	53(13.4)	2.36(0.58)

〈표 5〉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수용의사간 비교

N=395

	평 균	표 준 편 차	유의도 (양측검증)
홈스테이 우리집에서 홈스테이	2.54 2.16	0.66 0.67	10.11***
가족결연 우리가족과 결연	2.75 2.37	0.67 0.64	10.55***
지역·사회단체결연 본인이 자원봉사활동	3.04 2.53	0.56 0.65	12.71***
수양아들, 딸, 의형제 본인이 수양아들, 딸, 의형제	2.15 1.95	0.63 0.62	6.04***
남한주민의 일정소득을 각출 본인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의사	2.25 2.32	0.75 0.60	-1.98*
북한이주민을 직장에 고용할당 본인이 북한이주민을 고용	2.80 2.81	0.65 0.59	-39

* p <.05 ** p <.01 *** p <.001

로 북한이주민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간에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 분담보다는 자발적으로 물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주민을 직장에 고용할당 하는 제도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북한이주민 고용의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및 수용의 심도가 다른 문항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여 보았다(〈표 6〉 참조). 본인의 동네에 집단거주시설을 허용하는가와 옆집에 북한이주민이 이사를 와도 좋겠는가에 대한 태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집단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옆집에 이사를 오는 것에 비해 미세한 차이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주민이 동우회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것에 비해 같은 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긍정성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주민의 자녀가 나의 자녀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주민을 결혼을 통해 한 가

족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5.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비교분석

1)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을 위한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태도 비교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북한이주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살펴보면, 기독교 및 불교 신자가 다른 종교 교인에 비해,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족간 결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및 사회단체에서의 결연과 관련하여서는 20대의 연령층, 미혼, 대학재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한 주민들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내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표 6〉 북한이주민 생활적응지원 및 수용 심도가 다른 문항에 대한 비교

N=395

	평 균	표 준 편 차	유의도 (양측검증)
본인의 동네에 집단거주시설 허용	2.60	0.65	-1.34
본인의 옆집에 이사 환영	2.65	0.64	
동우회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	2.82	0.58	6.45***
직장의 같은 팀이 되는 것을 환영	2.63	0.62	
본인자녀와 친한 친구 가능	2.80	0.59	13.28***
본인자녀의 북한이주민과 결혼 허용	2.36	0.76	

* p < .05 ** p < .01 *** p < .0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과의 결연에 대한 태도 비교

독립변수	집 단	홈스테이	가족간 결연	지역, 사회결연	수양가족
연 령	F값	.17	.39	4.09*	.86
결혼지위	t-값	.40	.35	3.05**	-1.17
학 령	F값	2.62	3.47	4.17*	.14
북한연고유무	t-값	1.40	2.95**	-4.0	.45

* p < .05 ** p < .01 *** p < .001

여자보다는 남자가 긍정적이었으며, 북한 주민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때 혜택을 주는 데에도 여자보다 남자가 긍정적이었다(〈표 8〉 참조).

2)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 비교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를 사회인구학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북한이주민이 이주해 정착하는 데 물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표 9〉 참조). 북한이주민과 정서적 교류에는 대학재학생이나 자원봉사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북한이주민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는 20대와 40대, 미혼, 대학재학생, 자원봉사자,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주민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할 의사와 관련해서는 대학재학생, 자원봉사자, 북한연고자, 주관적 생활수준 상층보다는 중하층이 긍정적이었다.

가족간 결연을 통해 북한 가족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는 자원봉사자와 북한 유연고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이었다(〈표 10〉 참조). 북한 사람과 수양아들이나 수양딸, 의형제를 맺을 의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 지역의 직장에 근무하는 데에는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통일비용, 북한이주민 할당고용, 입학혜택, 주거혜택에 대한 태도 비교

독립변수	집 단	소득 중 통일비용 각출	직장에 북한이주민 할당고용	북한학생에 입학 혜택	북한이주민에 주거혜택
성 별	t-값	3.11*	-.25	2.32*	.84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을 위한 물질적 도움, 친구나 이웃되기, 자원봉사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 비교

독립변수	집 단	내가 물질적 도움	내가 친구나 이웃이 됨	내가자원봉사활동	우리집에서 홈스테이
연 령	F값	1.68	2.35	6.57**	1.21
결혼지위	t-값	-.34	1.80	2.60**	.21
학 령	F값	.08	4.46*	6.02*	7.93**
현재자원봉사 활동여부	t-값	-2.15*	-1.99*	-1.98*	-2.12*
북한연고유무	t-값	1.15	1.70	2.48*	3.33**
생활수준	F값	1.78	.71	1.75	4.49**

* p < .05 ** p < .01 *** p < .001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과의 결연, 북한근무, 북한이주민고용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 비교

독립변수	집 단	내가 가족결연	내가 수양가족	북한지역에 근무	북한이주민 고용
성 별	t-값	.97	.29	2.42*	2.29*
학 령	F값	2.03	.53	5.29**	1.30
현재자원봉사 활동여부	t-값	-2.40*	-.56	-.69	-1.26
북한연고유무	t-값	2.10*	1.02	.96	2.29*

* p < .05 ** p < .01 *** p < .001

남자와 대학재학생, 대졸이상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내가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경우 북한 주민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문항에는 남자와 연고가 있는 집단이 긍정적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북한 주민과 같은 팀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남자와 대학재학생, 주관적 생활수준 중상층 및 중하층이 보다 긍정적으로 답하였다(〈표 11〉 참조). '나는 북한 주민을 위한 집단 거주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좋다'에는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용하였다. '나는 북한 주민이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 것이 좋다'에는 남자와 대학재학생, 북한 유연고자가 긍정적이었다. 남자, 20대, 미혼, 대졸이상의 학력자, 연고가 있는 사람, 주관적 생활수준 중상층과 중하층이 내 자녀가 북한 주민의 자녀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에 보다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북한 주민이 우리 동우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좋다'에 20대와 40대, 대학재학생, 주관적 생활

수준 중상층과 중하층이 긍정적이었다(〈표 12〉 참조). '나는 내 자녀가 북한 주민과 결혼해도 좋다'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V.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방안

다음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북한에서 이탈해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들의 남한생활 실태와 적응문제에 대한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우선 북한 이주민들의 생활정착 지원 시설에 대한 제안을 먼저 제시하고,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소비생활, 의식주생활, 가족·아동·청소년생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과 팀근무, 집단거주시설 인정, 옆집되기, 자녀가 북한이주민 친구 갖기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 비교

독립변수	집단	북한이주민과 같은 팀 근무	동네에 북한이주민 집단거주시설	북한이주민이 옆집으로 이사	자녀가 북한이주민 친구 갖기
성 별	t-값	2.29*	.77	1.90*	2.06*
연 령	F값	.94	1.58	1.11	5.04*
결혼지위	F값	.32	1.33	1.15	2.88**
학 령	F값	3.76*	2.01	5.65**	9.37***
북한연고유무	t-값	1.07	2.00*	2.94**	1.95*
생활수준	F값	4.05*	2.59	2.07	3.02*

* p < .05 ** p < .01 *** p < .001

〈표 12〉 사회인구학적 변수별 북한이주민과 동우회원 되기, 자녀의 북한이주민 배우자 선택 인정에 대한 본인의 수용의사 비교

독립변수	집 단	북한이주민이 우리 동우회의 일원	내 자녀가 북한이주민과 결혼
성 별	t-값	1.21	3.43**
학 령	F값	4.82*	1.74
생활수준	F값	3.56*	1.12

* p < .05 ** p < .01 *** p < .001

1. 북한이주민의 생활정착 지원 시설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방안의 기본방향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모두 이들이 남한과의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하는 것에 그 대상과 영역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먼저 북한이주민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활적응교육을 연구, 뒷받침해야 한다. 더불어 남북한 주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문화적 충격을 이해하고 동일한 체제 내에 자연스럽게 융화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북한이주민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사회적응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사회통합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선행연구(이기춘 외, 2000)와 앞 부분에서 제시된, 탈북자들의 적응문제와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제안, 그리고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식실태조사를 토대로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탈북인들의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는 대책을 탐색하는 것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남한 주도의 남북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가상적인 상태에서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모색하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탈북자들이 탈북 이후 현재 남한에서 겪는 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남한 주민은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과 활동전개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일단 앞에서 본 연구가 전개되는 기본적인 방향을 남한 주도의 사회통합과정으로 상정했기 때문

에, 이후의 논문 구성과 전개도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초기 정착촌 제안을 중심으로 북한이주민의 생활정착 지원 시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방안을 정착촌의 건설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지원을 위한 정착촌의 성격

이 정착촌의 형성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북한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하고, 민간단체가 북한이주민들을 위한 생활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형태로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착촌은 일종의 적응공동체로서 일종의 집단가정(Group Home)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 안에서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이 영위되면서도 남한사회로의 통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교육과 경제적 자립준비가 이루어진다. 가족단위 시설과 독신자 시설을 별도로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들을 소규모로 공유하도록 만들어서 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 단위를 세분화하여 만일 독신들이라면 8명 정도가 가족단위로 묶여지고, 한 층에 8가구 정도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가구 단위별로 공동부엌을 만들어서 공동취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당이용과 세탁은 공동으로 하지만, 욕실, 거실, 방 2개 정도로 기본적인 사생활은 보장해 준다.

북한이주민 중 농촌 출신도 다수 이동할 것에 대비하여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분산해서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이주민에게 상담을 거쳐 정착촌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선택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주거지 선택의 자발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정착촌은 체험교육을 제공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대단위가 아닌 것이 좋으며, 이후 노인주거시설 등 공간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주상복합빌딩 등으로 세우는 방안이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이주민들이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머무르는 시설로서, 6개월 이후 직업을 얻게 되면 자립해서 이 정착촌을 떠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연고자가 있거나 정부지원의 홈스테이 가정에 머무르기를 원하거나 자원봉사단체가 지원하는 다른 시설에 의탁되는 북한이주민들은 이러한 정착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정착촌 안에서도 결연가족으로 연결되거나 입양되거나 홈스테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착촌의 거주단위(Unit) 간 결연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정착촌에서 제공하는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

이 정착촌 안에서의 생활은 북한 주민이 북한 이탈 후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시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시기, 사회통합에 필요한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시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착시설 안에서 <그림 5>와 같이 생활적응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긴장해소 및 정서안정을 위한 지원은 비교적 초기에, 생활교육은 중기에, 시민교육은 후기에 실시한다. 즉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가치관 교육이나 인간관계 등의 의식교육이나 실제 생활에 적응하고 자활과 경제적 준비를 위한 기술교육은

그 다음 단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수용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적응해 가는 데 필요한 시민교육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은 중기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착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달리 하여 성인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을 위한 학교교육 프로그램, 전주민을 위한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정착촌이 세워진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북한이주민을 위한 생활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자격증을 가진 생활상담사 등이 전문가로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

다음에서는 정착촌 시설에서 제공하는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교육프로그램을 각 생활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소비생활교육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사회화와 소비자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이주민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안되고 생활체험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적응이 예상되므로 자본주의체제로의 재

구 분	사회적응과정	적응지원프로그램	적응단계
초기	심리적 불안정 시기	긴장해소 및 정서안정지원	불안해소단계
중기	진로모색시기	생활교육 (의식교육 기술교육)	제도적 적응단계
	제도수용시기		
	문화수용시기		
후기	사회적동화시기	시민교육	문화적 적응단계

<그림 5>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단계와 교육 모형

사회화가 요구되며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개인의 소유개념, 소비자의 역할, 시장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소비자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교육방안

북한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교육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유형을 연령별, 교육수준별, 성장지역별로 구분하고, 또 남한생활에 대한 적응도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선정되도록 한다.

(2) 소비생활교육내용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소비생활 내용이 북한이주민을 위한 소비자교육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 ① 화폐의 단위와 사용방법: 탈북자들은 화폐의 단위가 다른데서 오는 화폐가치의 혼란으로 구매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탈북인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남한에서 처음 구매를 할 때 마을 근처 슈퍼마켓에서 양동이, 수저 비누, 반찬 등 10만원을 지출했는데 가격이 싼지 또는 비싼지에 대한 감각이 없었으며, 가격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화폐의 가치, 환산방법, 그리고 화폐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② 시장의 종류와 상품의 유통과정: 북한의 경우 암거래시장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제한적인 체험으로 남한의 다양한 시장형태, 복잡한 유통과정을 알지 못해서 소비자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계획경제 하에서의 배급체제였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시장의 특성, 시장의 종류, 거래방식에 대한 생활체험교육이 필요하다.
- ③ 상품의 종류와 용어에 대한 이해: 상품명에 외래어 및 외국어(특히 영어)가 많이 사용되어서 상품의 종류나 특성을 알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잘못된 구매를 하거나 당황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므로 상품의 이름, 종류, 구분방법 등을 학습시켜야 한다.
- ④ 광고에 대한 이해와 태도교육: 광고의 기능이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구매나 충동구매를 하게 되므로 광고의 기능, 목적, 그리고 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인 면접에 의하면, 처음에 광고를 보았을 때는 한 번 써보고 싶어서 돈을 낭비하였는데 이것이 후회되었고 나중에 광고에만 의지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 ⑤ 신용카드의 기능 인식과 사용방법 훈련: 신용카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크게 피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아주 사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신용카드의 특징, 사용방법, 분실시의 피해사항 등에 대한 세밀한 소비자교육이 있어야 한다.
- ⑥ 목돈의 활용방법: 정착금과 같은 목돈을 잘못 관리해서 모두 잃거나 손실을 크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한번에 사기를 당해 버리기도 하므로 금융기관의 종류, 이용방법, 장단점, 재테크에 대한 사례교육 등이 필요하다. 탈북인들 중에는 생활설계사 양성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직종이 직업능력개발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⑦ 소비자정보의 활용능력: 정보화사회의 진입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인터넷 상거래의 보편화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상표나 표시광고, 약관 등의 소비자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에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컴퓨터사용능력, 인터넷거래, 피해구제방법 등도 교육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교육내용을 조직하여 소비자유형별로 소비자교육을 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하며, 지원교육실무를 위한 소비자교육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3) 시간관리교육내용

- ① 시간관리방법: 북한에서는 짜여진 일과 내에서 생활하는 데 익숙했으므로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 시간이 희소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즉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관리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 ② 여가선용방법: 북한에서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고 여가라는 개념도 발달되지 않았다. 생활 속에서 여가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깨닫게 하고 스스로 여가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이주자와 남한주민으로 동호인 집단을 만들어서 여가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2) 의식주생활교육

(1) 의생활교육

북한이주민을 위한 의생활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모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의복은 제2의 언어로 착용자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상징적으로 전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의 차이를 생각이나 문화의 차이로 인식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그 사회의 규범에 맞는 외모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탈북인들의 경험을 보아도 남한인과 외모가 다른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으며, 남한인과 외모가 같아지는 것이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적용되는 의복과 관련한 규범들을 교육함으로써 의견상 남북한인이 서로 차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하다.
- ② 의복구매에 필요한 지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의복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품이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상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의복구매능력은 단기

간에 쉽게 터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선택선택의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교육이 도움을 줄 것이다.

- ③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 세탁기 사용방법은 비교적 쉽게 교육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옷에 따라 적절한 세탁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옷감에 대한 지식과 옷에 붙어있는 라벨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2) 식생활교육

- ① 식생활 괴리 극복을 위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식생활 부분에서의 영어나 외국어 등 식품·영양 용어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영양에 관한 지식·태도·실천 및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 예컨대, 균형식의 중요성, 동물성 식품의 지나친 섭취가 성인병의 기초가 되는 것, 뚱뚱한 모습이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섭취해야 할 음식, 식품 구매시의 식품표시의 의미와 방법 등에 관해 교육해야 한다.
- ② 독거 탈북인을 위한 급식시설을 마련한다면, 여기에서 식사도 제공하면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험과 배경, 관심사를 가진 북한출신들이 모임으로써 정보교환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도 얻는 곳이 될 것이다.
- ③ 차이를 인정하는 문화·교육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식문화 특성을 살리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펴서 우리 나라 식문화의 다양성을 유지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향토식품 음식점이나 제조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향토음식 조리 전수자를 우대하며, 지역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전문학교, 대학교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3) 주거생활교육

북한 이주민의 바람직한 남한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주거생활 교육내용에 주택자금관리 교육, 거주지 및 주택선택 교육, 주거안전 교육, 에너지절약 교육,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주택자금관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북한 이주민은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입한 경험이 거의 없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치를 일반 소비재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주 초기에 이에 대한 기초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 능력을 길러 줄 필요가 있다.
- ② 거주지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주민 스스로 주거지나 주택을 선택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남한에 이주하는 경우 주거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숙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인의 경우, 주거지나 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한다. 따라서, 북한 이주민이 그들에게 적합한 주거지나 주택을 성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현장답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택임대 또는 구입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주거안전교육이 요구된다. 남한의 주거설비나 주거내의 가전제품은 북한과 많이 다르므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스렌지를 포함하여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주거생활실습 프로그램' 형태로 실시하여 남한의 주거 환경에 대한 친근감과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 ④ 에너지절약 교육은 두 가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탈북인 대상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은 물이나 전기의 공급량이 필요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만 주민이 부담

하는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왜 절약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또,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고방식과 습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또,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 수거하는 생활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⑤ 남한 사회에 대한 생활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이주민 자신이 지역의 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강의나 실습보다는 특수목적의 지인 사회활동에 이웃끼리 참여하거나 단순한 친교를 위한 식사나 모임을 갖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단체활동에 참가한 경험이 많은 북한 이주민에게는 부담이 없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가족·아동·청소년생활교육

(1) 가족생활교육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이주민의 가족생활교육은 단신 이주민, 가족단위의 이주민, 이산가족, 남북한 출신 혼합가족 등의 형태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 ① 단신이주민인 경우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양부모자녀관계 형성,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 및 재사회화 프로그램, 소외감 및 고독감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 ② 가족단위로 남한에 이주하는 북한이주민의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생활보조금 지원 방안, 이웃과의 관계 형성, 지역사회 적응 교육, 가족문제 발생시 심리상담이나 조연 등을 실시한다.
- ③ 재결합하는 이산가족을 위해서는 이산가족특별지원법에 대한 교육과 재결합시 발생할 주요 법적 문제 대응 방안(호적문제, 중혼문제, 상속문제 등)과 심리정서적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한다.

- ④ 또한 정책적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주민이 초혼이나 재혼을 할 때에는 세계상의 혜택을 주는 것 등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결합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만하다.

(2) 아동·청소년생활교육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해서는 이들의 정체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개인의 자아, 성, 가족, 국가, 민족 정체성을 포함한다. 북한에서 받은 기존의 교육으로 인해 성, 역사에 대한 정체성처럼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금전에 대한 정체성처럼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유치원시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특히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일 후 유치원부터 청소년의 정규 학교 교과 과정이나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민족 정체성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본주의 이념과 정치체제와 그 운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유경쟁사회의 논리와 차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가르친다. 개인 중심사고와 집단중심 사고를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적응의 문제를 사고하도록 하고 남한주민들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회적 적응 촉진 전략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기존 교육내용을 시정하는 역사 및 사회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공산주의 하에서 왜곡되거나 감추어졌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스스로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능력을 갖추도록 1개월 정도의 역사지식 시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사실 중심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③ 자본의 축적과 사회적 의미, 금전의 효용과 그 의미에 대한 인지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탈북자들의 적응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지에 부적합한 것은 돈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다. 그러므로,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금전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알고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1차 적응과업이다. 청소년들이 금전의 의미를 알고 부의 배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성(性)과 관련한 정체성, 특히 여성의 성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남녀 교제와 공동 생활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성희롱, 성학대 문제 등 성과 관련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어울려 살다보면, 남성 우월, 여성 비하 등 부적절한 성에 대한 개념이나 정체성으로 인한 적응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성학대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갈등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 근래에 한국사회에서 제정된 가정폭력 및 학대방지에 관한 법률(1997)이나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법률(1999) 등 개혁적 법률에 이해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성적 접촉과 그로 인한 법률적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⑤ 청소년의 또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서보다도 또래 집단에서 수용되고 이해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에서 이주한 청소년들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있더라도 남한 청소년들의 학교환경과 또래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남한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뿐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운동경기, 가수, 텔런트,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은 우선 또래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동일감을 느끼고 그곳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 ⑥ 아동,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정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의 소외는 정보의 소외에서 비롯된다. 전자 게임은 물론 인터넷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통합 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방안 논의를 중심으로 남북한 생활문화의 통합을 다루었다. 분단 반 세기 이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가 어느 시점에서 통일된다고 할 때 가장 구체적으로 부딪치게 될 문제는 생활영역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생활상의 문제는 또한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인 동시에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실마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남한주민의 북한이주민 생활적응 지원에 대한 인식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적응지원 체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주택, 취업, 실업, 금융지원, 사회보장, 사회적응, 교육 등의 측면에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탈북인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측면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한주민들은 남북통일이 서로 왕래를 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하며, 사회통합 이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과는 대조적으로 본인 자신이 북한이주민이 생활적응을 해나가는 데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는 다소간 미온적인 의식과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이주민

을 위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수용의사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한주민의 의식을 감안하고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 상황을 상정한다면,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정과 그 이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생활정착시설의 설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집단가정의 성격을 띠는 이 정착시설은 기본적인 의식주생활이 영위되면서도 남한사회로의 통합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교육과 경제적 자활의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제안되었다.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단계를 심리적 불안정 시기, 진로모색시기, 제도수용시기, 문화수용시기, 사회적 동화시기 등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교육모형을 제시하여 제도적 적응을 해나가는 중간 시기에 생활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생활교육에는 소비생활, 의식주생활, 가족·아동·청소년생활 등의 영역에서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생활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생활영역별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소비생활교육은 북한이주민이 남북사회 간의 극명한 차이로 경험할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며, 화폐의 단위와 사용방법, 시장의 종류와 상품의 유통과정, 상품의 종류와 용어에 대한 이해, 광고에 대한 이해와 태도, 신용카드의 기능 인식과 사용방법, 목돈의 활용방법, 소비자 정보의 활용능력 제고 등을 포함한다. 계획적, 획일적 일과시간에 익숙한 북한이주민에게는 제한된 시간자원의 관리 및 여가선용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생활 교육은 외모관리, 의복구매, 세탁, 식생활 교육은 식품·영양에 관한 지식·태도·실천, 식품표시, 식생활 관련 외국어 및 외래어, 주거생활 교육은 주택자금관리, 거주선택, 주거안전, 에너지절약, 지역사회 참여의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이주단위에 따라 유연하게 채택되어야 하며, 이웃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심리 정서적 문제의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생활교육은 개인의 정체성, 역사관, 자본주의 사회관, 이성교제, 또래집단 문화, 정보화 등의 주제 차원을 포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주민들은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많은 부작용 양상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이 생활해 온 경험에 비추어보면서 남북한 사회통합 이후 북한주민들이 더욱 심각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통일이 남한 중심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할 때 통일 후 현재의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생활에서의 부적응을 북한 주민들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보여진다(한만길, 1997).

따라서 사회통합 이후 북한주민들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통일대비 과제이다. 하지만 통일의 시점과 형식이 어떠한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상황이 어떠한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이주민들의 생활적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합 이후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을 몇 가지 점검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주민의 생활정착과 적응 지원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탈북인의 생활정착이나 북한주민의 식량지원에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균형있게 북한이주민의 생활적응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북한이주민의 생활교육과 아울러 남한주민들의 통일외식과 사회통합과정에서의 북한주민 수용에 대한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주

민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에는 찬성하나 본인 자신이 북한주민을 수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와 의식을 지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 북한이주민이 사회통합 후 급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이들 시설을 위한 국고 마련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양적으로 팽창하는 정착시설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착시설 내 북한이주민의 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정착촌에서 제공하는 생활교육의 내용이 북한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과 체계 면에서 잘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시행해야 하리라고 보여진다.

■ 참고문헌

- 1) 김광익(1999). "문화소통과 문화통합: 통일문제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미간행.
- 2) 김대년·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박영숙·최연실(1999). "북한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에 관한 연구: 탈북인 대상의 면접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221-238.
- 3) 김동배(1996). "탈북자들의 적응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책".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 4) 김명세(1996). "탈북자의 사회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 5) 김형윤·여인곤·황병덕(1992). 독일 통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6) 김혜은·서봉연·이순형(1999a).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한국아동학회지 20(2): 279-297.

- 7) 김혜은·서봉연·이순형(1999b).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 변화에 대한 태도". 인간발달연구 6(2): 1-17.
- 8)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1996).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9)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1999).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2.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10) 박영숙·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김대년·최연실·석드보라(1999).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남한에서 인식한 차이".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1):64-73.
- 11) 박영호(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2) 박종철·김영운·이우영(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3) 백영옥(1998). 북한이탈주민 대책 연구. 서울: 세종연구소.
- 14) 서재진(1996). "통일한국의 사회문제 및 사회갈등". 김수곤 외 저.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15) 선한승(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16) 신율(1996). "독일 통일에 나타난 동독 주민의 문화적 갈등과 그 해소방안 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17) 양호민(1992).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 서울: 나남.
- 18) 오기성(1999). 남북한 문화통합론: 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통합과정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19) 오수성(1996).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김수곤 외 저. 통일 이후의 사회와 생활.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20) 오혜정(1995). 귀순 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21) 윤덕희·김도태(1992).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22) 윤여상(1994).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23) 윤인진(1998). 탈북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발표 논문. 미간행.
- 24) 이금순·송정호(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방안". 통일연구논집, 6(1): 71-94.
- 25)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박영숙·김대년·최연실(1997).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대한가정학회지 35(6): 289-315.
- 26)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박영숙·김대년·최연실(1998).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북한의 가족·아동·소비·시간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231-250.
- 27)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박영숙·김대년·최연실·민현선·박미영(2000).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V): 탈북인의 남한 생활 실태와 적응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8(6): 발표예정.
- 28) 이순형·이기춘·이기영·이은영·박영숙·김대년·최연실(1999). "북한의 아동양육 실태 및 관련변수". 한국아동학회지 20(4): 43-59.
- 29) 이은숙(1997). "남북한 사회통합의 이론적 탐색: 통일시대의 정신적 구심점과 하부구조". 이은숙 외 저. 남북한 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 30) 이영선·전우택(1996).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 31) 이은영·이기춘·이기영·이순형·박영숙·김대년·최연실(1999).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I): 북한의 의·식·주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15-28.
- 32) 이인정(1997).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과 전통문화의 역할". 이은숙 외 저. 남북한사회통합론. 서울: 삶과 꿈.
- 33) 이장호(1997).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과 과제". 경실련 통일협회 편.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심지.

- 34) 이장호(1999). "통일의 심리학적 접근".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미간행.
- 35) 이정우·김형수(1996).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6) 이종훈(1996). "탈북 북한주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탈북 북한주민 체제적응 현황과 과제. 통일정책 대토론회 발표논문. 미간행.
- 37) 임순희(1998).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38) 임현진(1999). "남북통합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의의, 현실 및 모색". 21세기 민족통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미간행.
- 39) 전우택(1995). 통일후 예상되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난민, 한국인 이민자, 북한 귀순자를 중심으로. 통일원 95 북한 및 통일 연구 논문집: 1-66.
- 40) 전우택(1997).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36(1): 3-18.
- 41) 전우택·민성길(1996).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서울: 오름.
- 42)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1997).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1): 145-161.
- 43) 한만길(1996).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논집 5(2): 215-238.
- 44) 한만길(1997). "북한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내용의 체계화 방안". 통일연구논집 6(1): 95-123.